

쌀 생산조정제 내버려둬야 하는가?

생산조정제 이것이 문제다.

농 립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 27,500ha(전국 재배면적의 2.6%)에 3년 동안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매년 1ha에 보조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15일에 밝힌 벼 재배면적 12% 감축 안에 연이어 나왔다. 이 때문에 농림부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며 생산조정제를 강행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식량포기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난 1월 9일, 생산조정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역에서도 전남도연합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연합회는 지역 농민단체와 함께 '쌀 생산조정제 시행반대와 농업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광주·전남 농관련 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생산조정제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은 2.6%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줄속으로 시행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생산조정제 이것이 문제다.

1) 현재의 생산조정제는 식량자급 포기 정책이다.

농림부는 현재 쌀 수급구조를 과잉생산구조로 보고 쌀을 감산하는 것으로 정책을 이미 전환하였다. 그 정책적 수단으로는 시장가격 하락과 벼 생산면적 감축계획 따위가 있으며, 이번에 도입할 생산조정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즉,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전환하든지 MMA를 확대하든지 간에 쌀 수입물량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2005년까지 3,200만 섬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점차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쌀 공급량은 수입물량까지 합쳐서 100%가 될 수 있지만, 자급률은 90% 안팎에 머물고 말게 된다.

그동안 쌀만은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명제마저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내 쌀 생산과 쌀 자급률을 점차 축소시켜 결국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농림부가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지만 생산과 자급률을 축소하면서 외치는 식량안보는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2) 일관성과 신뢰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4월 18일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쌀 재협상 결과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산조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조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생산을 감축하고, 쌀값을 하락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두 제도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작보상제도 충분한 사전준비 미흡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쌀 대책에 대한 농림부의 말 바꾸기 사

□ 올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2001.8)

- 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생산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 쌀산업발전종합대책(2001.9)

- 전작, 휴경 보상 등 생산조정제 도입을 2004년 이후 검토하겠다.



□ 2002년도 쌀 수급 안정대책(2001.12)

- 생산조정을 위한 전작시범사업으로 대체작물 재배 적극유도.

- 생산조정제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곧 방안을 마련하겠다.



□ 쌀 공급과잉과 WTO재협상에 대비한 양정의 전환(2002.4)

- 소득보전직불제와 생산조정제는 2004년 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 쌀산업종합대책(2002.4.6)

- 2002년 쌀부터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한다.

- 생산조정제는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는다.

레다. 정책적으로 계속 혼선을 빚음으로써 농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생산조정제는 쌀이 넘쳐난다고 보고,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줄여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는 3년 뒤 논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비탄력적이다. 또한, 임차농이 50%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농업 현실에서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 사이에 갈등과 농업소득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제도다.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1) 자급률 목표와 구체적 자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쌀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식량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과잉은 구조적으로 이미 굳은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정책과 의지가 결합된다면 오히려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자급률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배치해야 한다. 우선 쌀 소비량을 고려한 쌀 생산 필요량이 나오면 단수량과 재배면적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쌀 자급계획과 함께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를 위해 통일을 대비한 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급계획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2001년부터 식량자급계획과 자급량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2) '가칭)식량자급안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약 2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약 7%의 자급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국내상황을 봤을 때, 정부는 쌀 외에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독일,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식량자급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실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 상황과 유사한 일본도 법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 많은 농민단체들이 쌀 소비축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2002년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에서 개최한 『쌀 소비축진을 위한 각계 협력방안 토론회』 장면.

따라서, 전체식량자급률을 35% 이상으로 하고, 쌀 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명시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 및 안정을 도모하고, 감산정책 일변도가 아니라 쌀 등 주요 품목을 배치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혁신적인 쌀 소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이후 1인당 쌀 소비가 80kg대로 떨어지고 식생활 패턴이 서구문화로 바뀌어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는 일방적인 생산량 감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개정, 대북 지원 정례화, 급식소나 복지기관에 무상 신곡 제공 등 소비확대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비 대책은 대북 지원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보낸 200만석은 장기 차관으로 보내졌으며 국내 생산량으로 볼 때는 약 5%에 해당된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면서 남한의 과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정

부는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만 열을 올릴 뿐 제도적 개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제 2004년 쌀 재협상을 얼마 두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협상 이후를 대비해 쌀 대책을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농림부는 식량자급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농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

로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단기적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즉각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 농사를 축소하는 것은 전체 농업을 축소시키는 핵심 포인트다. 한농연과 400만 농민은 이를 주시하며 2004년 쌀 재협상 국면에서 이를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강력 대응!!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선포식 개최!! 쌀생산 조정제 신청거부 운동 전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지난 1월 8일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쌀생산 조정제 시행관련 전남지역 설명회' 개최에 항의하며, 행사장인 전남농업기술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연합회는 지난 1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금번 정부의 '쌀생산 조정제'는 2004년 쌀 재협상 이후인 2005년을 기준으로 '12%의 비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세워 놓고, '2005년까지 쌀생산을 인위적으로 비 재배면적의 2.6%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쌀 완전개방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식량자급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농업포기 대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전남도연합회는 지난 1월 10일 전남도연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거부운동과 광주전남지역의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지난 1월 17일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에 모여 「쌀 생산조정제 시행 반대 및 농업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광주·전남단체 연석회의」구성하고, 단체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전여농 전남여성농민연합, 한국카톨릭 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준), 광주전남 RPC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연석회의에서는 2003년 추곡수매가와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대하여 공동대응키로 결의하였으며, 정부의 쌀생산조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쌀산업포기·수입개방 음모! 쌀생산조정제 시행반대 및 신청거부를 위한 광주·전남 농관단체 연석회의 투쟁선포식"을 도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전남지역 농민단체장 회의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유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18일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석회의에 결정에 따라 「쌀생산조정제 시행 반대와 농업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광주전남농관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월 20일 전남도청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졸속적인 생산조정제 시행방침 즉각 철회, ▶2003년 추곡수매가 인하 및 동결방침 천명 수정 ▶통일을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수급정책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신청거부운동"을 전개 할 것을 선포했다.